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교육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문제점과 개정요구

2021년 8월 6일 (금) | www.nodong.org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02-2670-9293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쪽짜리 법안도 모자라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노동자 시민의 대중적인 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고,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적용제외, 50인 미만 적용유예 등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모자라 정부는 중대재해의 핵심대책은 외면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 중기중앙회등 사업주 단체는 법을 개악하고, 시행령을 통해 법을 무력화 하는 시도를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시행령 대응 투쟁을 결정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가맹산하조직 및 사업장 단위까지 입법예고 의견서 집단 제출과 개별 노동자 시민의 대중적인 참여 사업을 전개합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 임을 확인하고, 경영책임자 처벌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행진을 끝장내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전환점입니다. 현장에서 거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노와 염원을 모으고, 피해자 유족과 수 만명의 동조단식과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지 않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 출발로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집단 의견서 제출을 사업장 단위까지 조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집단의견서 제출

- ▷시기 : 8월 23일(월)까지
- ▷제출처 : 법무부 공공형사과 ·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감독과
- ▷가맹조직, 산하조직, 사업장, 노동자, 시민 개별
- ▷주요 내용
 - 2인1조, 과로사 예방 적정인력 확보
 - 하청, 특수고용 경영책임자 의무 전면 적용
 - 근로 기준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 준수의 무 부여
 - 법령 준수 점검 민간위탁 금지
 -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 시민재해 화학물질 전면 적용
 - 광주 붕괴 참사 적용

경영책임자 의무 시행령 왜 중요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1) 중대재해 발생해도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이 있어야 형사처벌,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수사해서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4가지 의무 중 <인력,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계 법령 준수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2) 2인1조 작업,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등 핵심대책이 누락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는 <유해위험 요인 점검,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및 전담조직> 등은 있으나, 핵심 대책인 <2인1조 작업이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고위험을 높이고, 매년 520명의 과로사를 유발하는 인력 부족이야말로 경영책임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에 규정된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시행령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인력>으로 둔갑시켜 법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3)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는 의견수렴과 안전보건관리 비용만 원청 책임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의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종사자 의견 수렴>과 <적정한 안전보건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보장>만 명시되었습니다.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보호구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정비용과 기간 보장이 명시되고, 경영책임자 의무 8개 조항이 전면 적용

되어야 합니다.

3) 법령 준수 점검 민간위탁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의 길이 열린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조치>에 대해 시행령에서는 법령 점검결과 보고, 인력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 출발인 법령준수 점검을 민간기관 위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민간기관 점검 위탁으로 점검결과 조작, 부실 점검, 점검당시만 피하고 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점검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위탁기관 처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없고, 경영책임자는 점검 위탁으로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 시민재해에 대한 법령 점검 민간위탁 허용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4) 과로사, 일터 괴롭힘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만 준수하면 된다는 시행령

청소노동자의 주간작업, 3인1조, 폭염, 폭설 시 작업중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금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화학사업장의 하청 노동자의 심야작업 금지, 공기단축 금지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있습니다. 하루 16시간 이상씩 일하는 버스, 화물운송, 택배 노동자의 휴식 보장도 각각 다른 법령에 있습니다. 법정 노동시간, 일터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몇 개 법령만 해석으로 명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하는 법령이 명시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고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직업성 질병, 화학물질 시민재해 시행령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무력화

1) 급성중독 24개만 명시. 직업성 질병 처벌 불가

사망만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부상, 질병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부상과 질병은 7년이하 징역과 1억이하 벌금으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동일한 처벌입니다. 그러나, 직업성 질병은 동일한 유해요인 1년에 3명이상 발생으로 엄격하게 규정했으면서도 시행령에서 급성중독으로만 또 다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과로로 사망하면 적용, 식물인간이 되면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면 적용, 평생을 의료장비에 의존해서 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으로 직업성 질병에 대한 처벌을 무력화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은 모두 명시되어야, 보상만하고 끝나는 직업성 질병 예방제도가 현실화 됩니다.

2)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 시행령으로 무력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비롯해 화학물질의 폭발, 누출, 중독에 의한 시민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적용화학물질을 협소하게 규정했습니다. 화학물질관련 점검, 위험요인 신고,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적용대상을 11개 법령의 제한된 물질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의 유독물질만 700여종 배출량 조사물질만 400여종인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은 사고 대비물질 97개종만 해당됩니다. 원료 제조물질을 특정해 달리는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편법적으로 수용해서 법을 무력화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일부 조항을 적용제외하고 있습니다.

3) 광주 붕괴참사도, 판교 환풍기 참사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시민재해가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법에서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든 또 다시 적용제외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붕괴 참사와 같은 철거 해체작업,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장비 붕괴로 인한 시민재해도 적용규정이 없습니다. 판교 환풍기 붕괴 참사와 같은 실외에서 진행되는 공연, 강연, 교육 등은 입법발의 법안에 있었던 대상 조차 명시하지 않았습니. 참사가 발생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시행령.. 과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언제까지 방치되어야 합니까.

4)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 나몰라라

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 공중 교통수단이 도급, 용역,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안전 확보 적정비용의 지급>에 대한 확인의무만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적정비용의 기준도 없으므로 시행령은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사실상 무력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는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 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 투쟁으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행진을 끝장냅시다.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투쟁의 물꼬를 튼시다.

다.